

PART

02

인쇄매체 신문 등



01 e대한경제

사업명

세이프티 코리아 : 건설현장 '생명지키기' 캠페인

실적

기획기사, 건설안전포럼, 지면캠페인, 카드뉴스

내용

▷ 건설안전 기획기사 보도 : 10회

- 1회 4월 14일 선진국의 건설안전 독일에서 배운다
- 2회 4월 20일 선진국의 건설안전 영국에서 배운다
- 3회 4월 27일 선진국의 건설안전 미국에서 배운다
- 4회 5월 10일 선진국의 건설안전 싱가포르에서 배운다
- 5회 5월 12일 선진국의 건설안전 일본에서 배운다
- 6회 5월 18일 건설안전, 글로벌 선진 건설사에 배운다
- 7회 7월 28일소리없는 위협 '폭염' 건설현장 온열질환 비 상
- 8회 9월 21일 "건설업 중대재해, 과당경쟁·고령화·법률 구조 탓"
- 9회 9월 26일 건설안전산업 육성에 팔 걷은 공공
- 10회 10월 21일 진화 거듭하는 스마트 안전기술, 중대재해 줄인다

▷ 스마트건설안전포럼 : 1회

- 5월 19일 서울 서초구 The-k 호텔
- 주제: 중대재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기술 추진방향
- 발표내용
 - 스마트안전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 스마트 안전기술의 현재와 미래
- 주최 : e대한경제, 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건설안전협회

내 용

▷ e대한경제 지면 캠페인 : 12회

- '중대재해처벌법' 일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 4월 2회, 5월 2회, 6월 3회, 7월 2회, 8월 2회, 10월 1회

▷ 카드뉴스 : 6회

- 1회 선진국의 건설안전 독일에서 배운다
- 2회 선진국의 건설안전 영국에서 배운다
- 3회 선진국의 건설안전 미국에서 배운다
- 4회 선진국의 건설안전 싱가포르에서 배운다
- 5회 선진국의 건설안전 일본에서 배운다
- 6회 건설안전, 글로벌 선진 건설사에 배운다

대한경제

[e대한경제·안전보건공단 공동기획] 선진국의 건설안전...독 일에서 배운다

2022년 11월 29일 (목)

정부와 조합·관련 협회가 상호보완적 안전보건제도 운영

안전관리 지원·지원 및 계획 수립·실행하는 안전보건제도 운영



독일의 건설안전 제도는 건설안전 관련법령과 건설안전 관련 제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특히 두 법제정시 안전보건공단 제도는 독일 안전 관련 제도, 건축주에게 건축 과정, 작업장, 건축물의 사용 및 지킴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건축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법령을 작업자, 계약, 안전보건계획은 관리 단계에서 계획자가 먼저 작성하고 작업이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경제

[안전보건공단 공동기획] 선진국의 건설안전... 싱가포르의 건설안전 법·제도

2022년 11월 29일 (목)

첨단 IT기술 활용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세계 최대 건설 프로젝트 생애주기별 위험요인 추적·관리

[e대한경제·건설을 기자] 싱가포르의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선진국으로 꼽힌다.

특히 건설 프로젝트의 생애주기별 위험요인 추적, 관리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프로세스는 세계 여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9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연구원 건설업 생애주기별 위험요소 관측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건설안전 제도는 지난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관리법 제정으로 본격 시작됐다.

건설안전 기획기사 보도

대한경제

2022년 11월 29일 (목)

건설안전산업 육성에 달 걸은 공공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설계업체 등에 계약시장 진출 모색
안전공단, 우수 중소기업 및 스마트형 발주 - 건설업 지속
업계 - 전문가, 발주자 네트워크 및 판로확보 등 체계적 진출전략 필요해

[대한경제=권성종 기자] 공공기관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시설물 및 건설안전산업 및 안전기술의 국내외 시장영역 확대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다만, 안전산업의 판로를 넓히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발주자 네트워크 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 교통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들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관리원은 지난 20일 해외진출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관리원은 이미 지난해 말 건설·사업안전 분야 16개 민간 기업과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기업이 해외 진출과 관련, 장기 간담회를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기업성장담당센터를 통해 5Q(품질·인성)와 한국건설방역연구원 등 주요 안전관련 업체를 합치면 바 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관리원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한국형 안전관리 모델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우수 중소기업의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개척방안을 제시했다.

토 건산·사설 안전산업협회 민간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유관 기업들과 함께 국토안전관 등 반정부 포럼을 발족하기로 했다.

대한경제

2022년 11월 29일 (목)

[안전보건공단 공동기획] 선진국의 건설안전... 영국에서 배운다

건설업에만 적용하는 법령CDM...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강조
안전관리의 무게중심 사공 전 계획·설계 단계로 이동



[대한경제=권성종 기자] 영국 건설산업에서 안전관리 제도의 핵심인 CDM(The constructob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으로 꼽힌다.

19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연구원의 건설업 생애주기별 따른 산업재해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건설안전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업법)과 그 하위법령들로 구성된다.

영국의 산업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법으로, 7개 하위법령 중 6개 법령은 전 산업에 적용되지만, CDM은 오직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하위법령이다.

건설안전 기획기사 보도

2022년 스마트건설안전 포럼 (공청회 및 기술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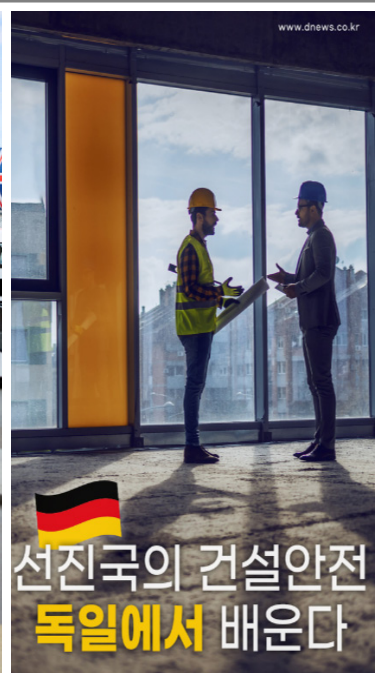
* 일시: 2022. 5. 19. (목) 09:30 ~ 16:30 * 장소: The-K호텔서울 분관 2층 가야금홀 B
 * 주최: 국토안전관리원 * 주관: KSCSA * 후원: 대한경제



스마트건설안전포럼



스마트건설안전포럼



카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일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 기업·기관·단체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 ② 종사자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 ③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인력·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또한 재해가 발생하면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www.koshasafety.co.kr)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령·해설서·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업종별 자율점검표·감의동영상
 - 재정지원·컨설팅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면캠페인

02 (주)내일신문

사업명

산재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답

실적

기획기사, 특집프로그램, TV캠페인

내용

- ▷ 산재사망줄이기 기획 취재 보도 : 7회
 - 1회 5월 24일 처벌강화만으론 한계, 안전보건 인식 개선이 우선
 - 2회 6월 21일 재해 위험 높은 업종 '자율점검표'부터 활용해야
 - 3회 7월 19일 'CSO가 있어 CEO는 모른다' 는 주장 수용 못해"
 - 4회 8월 23일 안전보건 우수사례1 '원엔지니아링' 등
 - 5회 9월 14일 기고문 모든 노동자가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방법
 - 6회 9월 27일 안전보건 우수사례2 '삼화페인트' 등
 - 7회 10월 11일 안전보건 우수사례3 'SK실트론 구미3공장' 등
- ▷ 산재사망줄이기 지면광고 : 2회
 - 6월 27일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 9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일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 ▷ 산재사망줄이기 카드뉴스 : 5회
 - 1회 5월 31일 안전보건관리체제 지원(8면)
 - 2회 6월 30일 자율진단표 적극 활용하기(8면)
 - 3회 7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Q&A(9면)
 - 4회 8월 31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10면)
 - 5회 9월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인터뷰(9면)

내 용

- ▷ 이벤트퀴즈 : 4회
 - 1회 6월 7일 중대재해처벌법
 - 2회 7월 13일 안전보건관리체계
 - 3회 9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 4회 10월 12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 동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 : 1편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 영상으로 한.방.정.리!(2분)
 -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게시 각 1회

- ▷ 전자책 콘텐츠 제작 홍보 : 1편
 - 안전문화확산 홍보활동 전자책 제작
 - 페이스북 게시 각 1회

산재 사망 줄이기

처벌강화만으로 한계, 안전보건 인식 개선이 우선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자 소폭 감소 그쳐 ...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정부 지원 이용해야

정부는 1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으로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인식을 기대했지만 기대보다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가 강화된 만큼 그 기운에 힘입어 안전보건관리가 조금 더 엄격히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특히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산재 사고예방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인식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대기업에 비교해 자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의 체계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재법, 안전보건관리 구축이 낫!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됐지만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대재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노동법률정책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환 의원은 "중대재처벌법 시행 1분기 사망사고 건수는 141건. 이 중 안전 사망사고는 15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는 163건, 사망자 155명이고 비교하면 각각 22건, 8명 줄었다. 하지만 중대재처벌법이 시행된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 처벌 강화만으로 한계 ... 정부는 중대재처벌법 시행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으로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인식을 기대했다. 하지만 중대재처벌법 효과는 기대보다 낮았다. 기업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1분기 사고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제조업이 11명, 건설업이 10명, 서비스업이 7명, 농업·축산업이 2명, 기타 1명이었다. 50대 이상 사망자는 10명, 50대 미만 사망자는 11명이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명, 건설업이 10명, 서비스업이 7명, 농업·축산업이 2명, 기타 1명이었다. 50대 이상 사망자는 10명, 50대 미만 사망자는 11명이었다.

50대 이상 사망자는 10명, 50대 미만 사망자는 11명이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명, 건설업이 10명, 서비스업이 7명, 농업·축산업이 2명, 기타 1명이었다. 50대 이상 사망자는 10명, 50대 미만 사망자는 11명이었다.

산보전되는 것은 안전 강화와 법적 조치로 막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산재 사망자를 줄이려는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2022년 4월 21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노후화된 시설을 새로 건설할 예정이었던 2022년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중대재처벌법 시행 이후 규모별 산재 사망 현황

규모(건)	연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사망	사망률	사망률	사망률	사망	사망률	사망률	사망률	사망	사망률	사망률	사망률	사망	사망률	사망률	사망률
2021년	11	70	51	68	45	28	35	15	18	12	7	12	5	2	11	11	11
2022년	11	69	50	68	45	28	35	15	18	12	7	12	5	2	11	11	11
2021년	122	70	51	68	45	28	35	15	18	12	7	12	5	2	11	11	11
2022년	122	70	51	68	45	28	35	15	18	12	7	12	5	2	11	11	11
합계	133	140	101	133	89	56	70	30	36	24	19	24	9	4	22	22	22
증감률		-14	-7	-7	-11	-11	-6	-4	-4	-3	-1	-3	-2				

※ 산재 사망률: 산재 사망자 수 / 총 근로자 수 × 100 (단위: 건/10만명)

중대재처벌법 시행 이후 규모별 산재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여전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사망률이 더 높았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산재예방 5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 안전보건교육 실시

3. 안전보건점검 실시

4. 안전보건기록 관리

5. 안전보건개선 조치

틀에 갇힌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올해 운반·하역 사고사망자 벌써 25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노후화된 시설을 새로 건설할 예정이었던 2022년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작전의 3.6배, 고용부 '위험 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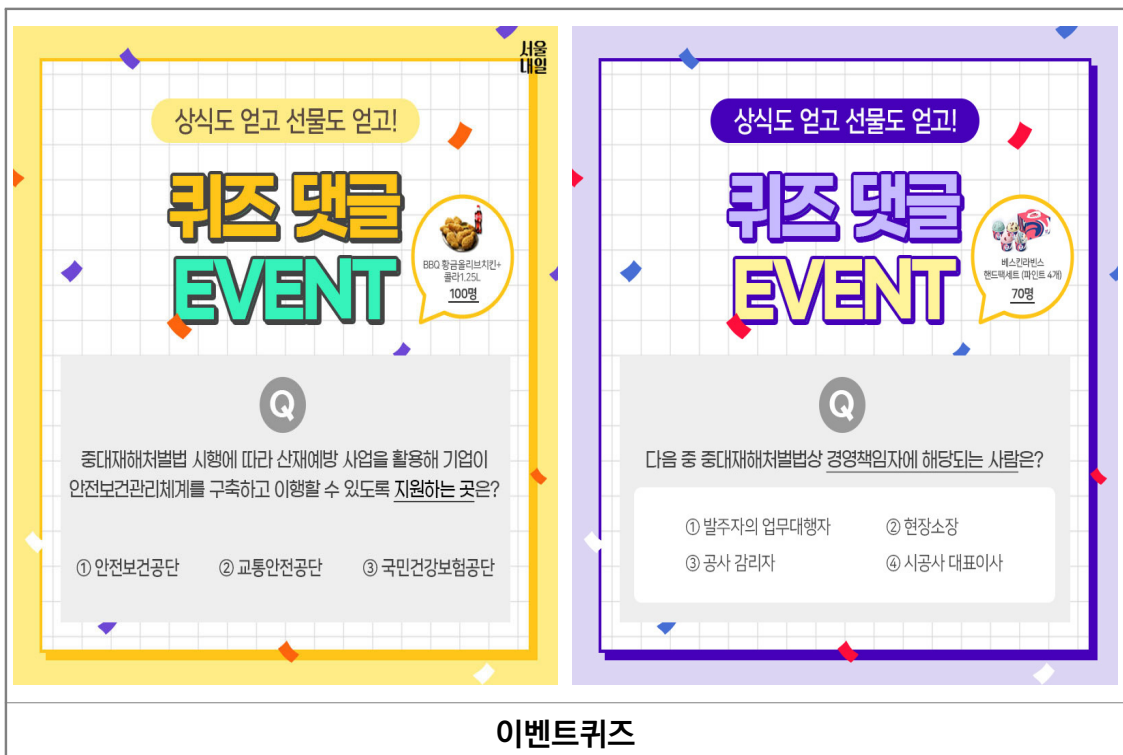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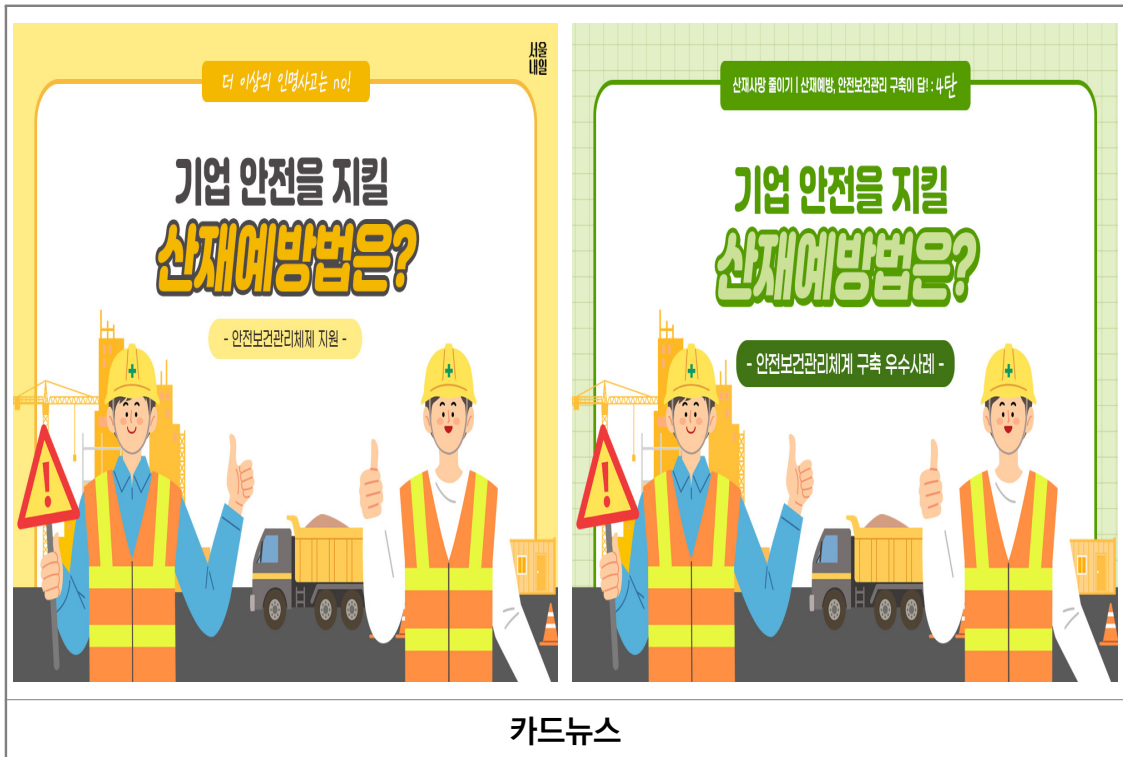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기록 관리

안전보건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동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

전자책 제작 홍보

03 (주)뉴스핍

사업명

산재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답

실적

기획기사, 특집프로그램, TV캠페인

내용

- ▷ 동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 : 2편
 - 1편 안전119: 전기편(1분 10초) / 2편 안전119: 사다리편(1분 20초)
 - 뉴스핍홈페이지, 유튜브 게시 각 1회
- ▷ 안전문화확산 칼럼 기고 : 5회
 - 1회 7월 18일 처벌 위주 중대재해법 보완되어야 (박영암 한성대 명예교수)
 - 2회 7월 27일 모두 패자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 3회 8월 1일 방송제작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전환 절실하다 (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4회 8월 15일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조건' (장욱희 커리어파트너 대표)
 - 5회 8월 17일 안전 사회 - 나의 인격과,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 ▷ 기획기사 보도 : 5회
 - 1회 7월 27일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 2회 7월 27일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 3회 7월 27일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 4회 7월 27일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 5회 7월 27일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 6회 7월 27일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내 용

- ▷ 안전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 5회
 - 뉴스핌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1회 송해나 / 2회 (여자)아이들 / 3회 앨리스 / 4회 NTX / 5회 TFN / 6회 버스터즈
 - 유튜브 게시 각 1회
- ▷ 산재사망 줄이기 카드뉴스 : 26회
 - 1회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 2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 3회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의 / 4회 출퇴근길 사고, 중대재해에 해당할까 / 5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처벌
 - 6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 7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 8회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교 테크노밸리 추락사고
 - 9회 수술대에 오를까 중대재해처벌법 / 10회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 11회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기업 해외법인'
 - 12회 어린이집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 13회 중대재해처벌법 지붕추락 사고 사례
 - 14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디스플레이 산업 사고 0건 / 15회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추진 논란
 - 16회 7명 숨진 현대아울렛 화재,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 17회 중대재해법, 여전한 사각지대
 - 18회 화일약품 공장폭발, 중대재해법 적용받을까 / 19회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 받는다. / 20회 불매운동으로 번진 SPL 사고
 - 21회 대우조선 올해만 세번째 재해사고, 특별근로감독 들어가나 / 22회 안성 공시장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 23회 충북도지사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 24회 삼성물산까지..월드컵대교 근로자 사망사고
 - 25회 골프장 연못 익사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어려워 / 26회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은



뉴스핌 -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방심에는 마침표.

조심에는 느낌표!

안전은 권리입니다



캠페인 개요 기획기사 기고 카드뉴스 영상 관련기관

캠페인 개요

국내에서는 1995년 이전까지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민간주도의 비체계적인 활동에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 주도로 안전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전문화는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충만되어 모든 활동 속에서 “안전”이 체질화되고, 또한 그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 방지, 태도 등의 총체적 의미를 말합니다.

안전문화확산 홍보활동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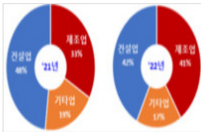

동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



[중대재해법 6개월]⑤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손질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노동...

22-07-27 14:30



[중대재해법 6개월]④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서울=뉴스핌] 경경환 기자 = # A사 :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 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 등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할 경우 대표이사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누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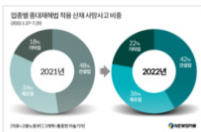
22-07-27 14:00



[중대재해법 6개월]③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서울=뉴스핌] 김진정 기자 = 중대재해법이 도입된 지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법 시행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산재 사고 발생률이 줄지 않고, 처벌 대상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고 예방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

22-07-27 13:30



[중대재해법 6개월]②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6명(87건)이 숨진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었다. 사업장에서 기...

22-07-27 12:00

기획기사 보도



[기고] 환경과 안전 보장하는 화학물질 관리 솔루션 필요한 때

올해 여름 유난히도 덥고 습했다. 매일 불쾌지수를 새롭게 경신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매해 여름을 보내면서 올해가 유달리 덥고 지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

22-08-09 15:51



[기고] 방송제작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전환 결실하다

현재 청송받고 있는 K-콘텐츠의 깊은 그늘 중 하나가 바로 대다수 방송제작현장이 사실상 안전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제작현장 역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래 산업안전보...

22-08-01 15:02



[기고] 모두 패자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법은 적용수록 좋은 사회라 한다. 하긴 약법삼장(約法三章)이 세상을 얻기도 했다. 실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법, 즉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함이 점점 늘어난다. 현대 감시와 규제가 증시되는 사회는 아무도 원하는 것은 아닐텐...

22-07-27 18:04



[기고] 처벌 위주 중대재해법 보완되어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소속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대폭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법(일명 '김용균법')이 2020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 사망사고가 늘어나자 ...

22-07-18 09:54

안전문화 확산 칼럼 기고



[안전119-카드뉴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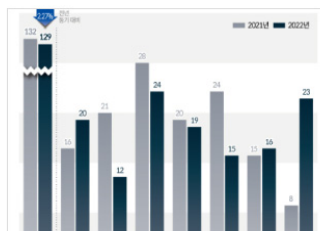
[안전119-카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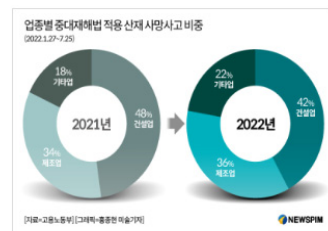
[안전119-카드뉴스] 출퇴근길 사고, 중대재해에 해당할까?



[안전119-카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의



[그래픽] 월별 중대재해법 적용 사망사고 현황



[그래픽] 중대재해법 적용 업종별 산재 사망사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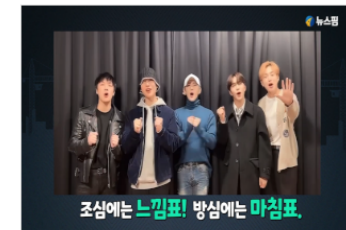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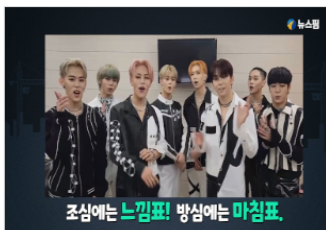
뉴스핌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_앨리스



뉴스핌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_버스터즈



뉴스핌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_머스트비



뉴스핌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_TFN



뉴스핌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_NTXX



뉴스핌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_송해나

이벤트퀴즈

04 (주)동아일보사

사업명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

실적

기획기사, 전문가 기고문, 지면 캠페인

내용

- ▷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 기획기사 : 5회
 - 1회 4월 25일 기고문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일을 앞두고...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종주)
 - 2회 6월 7일 산업재해 없는 클린사업장 만든다
 - 3회 6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안전 선진화로 가는 원년 되길”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종주)
 - 4회 9월 26일 기고문 노사의 인식과 관행의 변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중앙대 교수 문광수)
 - 5회 10월 25일 기고문 산재예방, 패러다임이 바뀐다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종주)
- ▷ 동아일보 지면 캠페인 : 2회
 - 오프라인 지면 캠페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모두의 노력’ 2회

● 기고 문광수 중앙대 교수

노사의 인식과
관행의 변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우리나라 산업 재해율은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감소하였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1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80명, 재해자 수는 12만2713명으로 단순 계산해도 하루에 5.7명이 일과 관련하여 사망하고, 1시간에 14명이 재해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의 안전심리학자 스코트 겔러(Scott Geller)는 '안전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safety)'이라는 책에서 '안전은 인간 본성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즉, 안전관리는 인간 본성과의 싸움으로 생산관리, 품질관리보다 더 어렵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안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조, 근로자 모두가 '일 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10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도 안전보건에 관련된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지원은 기업 특성에 맞추어 이뤄져야 한다.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기업은 자율적 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에 지원을 해야 한다.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사업장에 맞춤형으로 방문·설명하는 서비스(안전 코디네이터나 같은 지역 또는 산업의 소규모 기업이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업은 안전이 사내에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노력이 직원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핵심성과지

표에 안전을 포함시키고, 특히 안전관리자나 임원에게는 충분한 비중을 적용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이 생산이나 품질을 관리하는 수준만큼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업 안전관리 방식을 '불안전 행동 감소'에서 '안전행동 증가'로 진화시켜 긍정적인 경향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에 흥미, 의미, 가치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조의 제1 목표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조는 일터에서 위험을 발굴하고 이를 제거하는 활동을 주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안전 사안에 대해 건의·실용·점검·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개인이 작업중지권을 잘 모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무엇보다 노조에서는 동료와 근로자들이 서로 어떻게 일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작업 전·중·후 안전에 관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이 핵심과제라는 것을 내재화해야 한다. 법·제도·안전관리 시스템이 사고를 100% 예방할 수는 없다. 안전의 마지막 패치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규정에 대한 준수 노력이다. 과거와 달리 작업 전, 더 많은 사항을 점검하고 작업 중에도 안전에 관한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존재지만 나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다는 인식으로 불만함과 수고스러움을 감수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필요가 있다.

● 기고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예방, 패러다임이 바뀐다

산재예방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지난 정부는 5년 안에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국민 앞



에 섰었다. 그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사고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0.52를 2022년 0.26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사망자 수로 보면 964명이 482명으로 줄어야 한다. 가히 혁명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산재예방 인력과 일터 감독 인력 등을 대폭 늘렸다. 또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설비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비용을 획기적으로 증액했다. 작업장 감시·감독과 지도를 위한 패트롤 사업을 도입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실제 성과는 목표와 너무나 차이가 크다. 2021년 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이고 사고사망자 수는 828명이었다. 사고 사망 만인율 0.09, 사망자 수 136명을 줄이는 데 그쳤다. 목표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사망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과 얽혀 있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고 복잡다단한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일터 안전 주체가 되어 열심히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발상과 전략이 현장에서 통할 리가 없었다. 지난 20년간 산재사고 사망 추이를 분석하면 5년이란 짧은 기간에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20년간의 연도별 사망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등산객이 높은 산에서 하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 1.24 인력의 산봉우리 형태를 보이다가 본격 하산이 시작됐다. 그 뒤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절반이 훨씬 넘는

0.7까지 떨어져 2014년 0.58을 기록했다. 추세선의 모양을 보면 매우 가파르게 하산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매우 완만한 하산 모양을 보인다. 2021년까지 7년간 0.15만 낮아졌으니 머릿속에 어렵지 않게 그 모양이 떠오를 것이다. 이는 냉철하게 보면 공급자 중심, 감독 위주, 정부 주도의 산재예방 전략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계에 봉착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새 정부는 일터 안전보건의 주체를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기업과 근로자로 바꾸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처벌과 감독 위주가 아니라 사전예방 중심의 산재예방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자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앞에 서서 따라오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손을 잡고 이끄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앞에 가고 정부는 뒤에서 이들을 미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기도 하다. 1981년 노동부가 발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뒤 40여 년 만에 산재예방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형 산재예방 패러다임이다. 수십 년간 우리의 나라에 박혀 있는 정부 주도의 산재예방 전략을 바꾸는 것을 불편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을 터이다. 이런 방식으로 산재사망을 과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그 성공 여부는 오롯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터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일찍 뿌리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일터 안전을 위한 혁신에는 노·사·정 모두의 협력과 국민의 적극적 지지가 필수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기고문



내년부터 물가지수에
음식배달비 분리 공표
통계청 "자가주거비 반영도 검토"

통계청이 앞으로 물가를 발표할 때 음식 배달비도 별도로 공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음식 배달비가 보편화한 데다 배달비가 오르면 관련 지출도 늘어난 때문이다. 통계청은 1월 월간 국가 소비자물가지수 월곡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따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중 음식점 물가지수에는 배달 음식의 가격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돼 있다. 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제 음식 가격에 배달비를 분리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치는 300여개는 배합지수를 별도 항목으로 통계를 낸다. 통계청은 또 1인 가구, 3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하기로 했다. 가구마다 소비 행태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 품목의 가중치를 조정해 현실 재현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통계청은 "2020년 기준 월 (자가주거비) 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2021년 1월 1일부터 자가주거비는 현행 1월 1일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가주거비를 현행 1월 1일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이월 물가 상승을 둔다. 자가주거비를 제외한 채 1월 물가 상승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발표하면, 1월 물가 상승률이 1월 물가 상승률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종=이재현 기자 jre@donga.com

동아경제

주요일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제31454호

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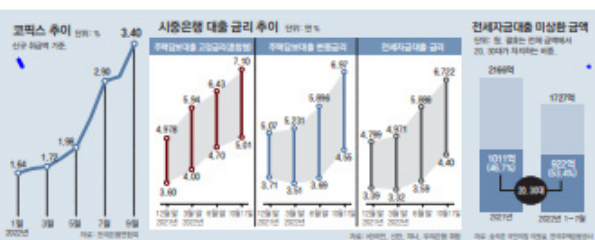
가업문의 1644-1436

코픽스 10년만에 최고... 주담대 변동금리도 7% 넘어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9월 코픽스 3.40% - 0.44%p 급등
지난달 주담대 고정금리 이어
오늘부터 변동금리도 7% 진입

영끌족 이자부담 눈덩이 '경고등'
전세대출 미상환 등 부실 속출
"금리전환-할인 등 지원책 필요"



● 주담대 변동금리도 14년 만에 7%대 진입

17일 한국은행정책에 따르면 9월 신규 위
금리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2.96%)에 비
해 0.44%포인트 급등했다. 2012년 7월(3.40%)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2년 12월(3.09%) 이후 9년 8개월 만에 3%
대에 진입한 것이다.

● 주담대 변동금리도 14년 만에 7%대 진입

17일 한국은행정책에 따르면 9월 신규 위
금리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2.96%)에 비
해 0.44%포인트 급등했다. 2012년 7월(3.40%)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2년 12월(3.09%) 이후 9년 8개월 만에 3%
대에 진입한 것이다.

● 주담대 변동금리도 14년 만에 7%대 진입

17일 한국은행정책에 따르면 9월 신규 위
금리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2.96%)에 비
해 0.44%포인트 급등했다. 2012년 7월(3.40%)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2년 12월(3.09%) 이후 9년 8개월 만에 3%
대에 진입한 것이다.

● 주담대 변동금리도 14년 만에 7%대 진입

17일 한국은행정책에 따르면 9월 신규 위
금리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2.96%)에 비
해 0.44%포인트 급등했다. 2012년 7월(3.40%)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2년 12월(3.09%) 이후 9년 8개월 만에 3%
대에 진입한 것이다.

지난달 전국 집값 -0.49%... 13년 8개월만에 최대 하락

전셋값도 0.50% 동반 하락
"당분간 집값 내림세 지속될 것"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0.49%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7일 한국은행정책에 따르면 9월 신규 위
금리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2.96%)에 비
해 0.44%포인트 급등했다. 2012년 7월(3.40%)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2년 12월(3.09%) 이후 9년 8개월 만에 3%
대에 진입한 것이다.

전셋값도 0.50% 동반 하락
"당분간 집값 내림세 지속될 것"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0.49%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7일 한국은행정책에 따르면 9월 신규 위
금리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2.96%)에 비
해 0.44%포인트 급등했다. 2012년 7월(3.40%)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2년 12월(3.09%) 이후 9년 8개월 만에 3%
대에 진입한 것이다.

전셋값도 0.50% 동반 하락
"당분간 집값 내림세 지속될 것"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0.49%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7일 한국은행정책에 따르면 9월 신규 위
금리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2.96%)에 비
해 0.44%포인트 급등했다. 2012년 7월(3.40%)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2년 12월(3.09%) 이후 9년 8개월 만에 3%
대에 진입한 것이다.

전셋값도 0.50% 동반 하락
"당분간 집값 내림세 지속될 것"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0.49%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7일 한국은행정책에 따르면 9월 신규 위
금리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2.96%)에 비
해 0.44%포인트 급등했다. 2012년 7월(3.40%)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2년 12월(3.09%) 이후 9년 8개월 만에 3%
대에 진입한 것이다.

전셋값도 0.50% 동반 하락
"당분간 집값 내림세 지속될 것"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0.49%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7일 한국은행정책에 따르면 9월 신규 위
금리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2.96%)에 비
해 0.44%포인트 급등했다. 2012년 7월(3.40%)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2년 12월(3.09%) 이후 9년 8개월 만에 3%
대에 진입한 것이다.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모여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안전을 위한 [관심]
우리를 We한 [참여자]!

안전을 위한 [투자]
우리를 We한 [능력]!

안전을 위한 [식각]
우리를 We한 [생각]!

안전한 우리들의 미래를 위한
안전한 우리들의 미래를 위한

지면 캠페인

05 (주)매일노동뉴스

사업명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위험에 남겨진 사람들’

실적

기획기사, 전문가칼럼, 좌담회, 온오프라인 광고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닿지 않는 사람들 현장 취재 및 심층보도 : 4회
 - 1회 6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위험에 남겨진 사람들 ①] ‘건설기계 바깥’의 건설기계 운전자
 - 2회 8월 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위험에 남겨진 사람들 ②] 위험을 종잣돈 삼아 일하는 플랫폼 이동노동자
 - 3회 9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위험에 남겨진 사람들 ③]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현장실습생
 - 4회 10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위험에 남겨진 사람들 ④] 감춰진 위험의 이주화 “죽지 않으면 산재신청 생각 못 해”
- ▷ 안전문화확산 전문가 칼럼 기고 : 22회
 - 1회 3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을 맞이하는 기업의 자세 - 권아영 공인노무사
 - 2회 3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불확실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것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 3회 4월 4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으로 산재 감소 기대 - 한복순 대한건설보건학회 회장
 - 4회 4월 14일 다운폴 : 안전불감증의 발생기전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
 - 5회 4월 25일 건설업 산재 감소 ‘협력업체 안전관리 역량’에 답 있다 - 권영일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내 용

- 6회 4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이야말로 제대로 된 추모다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7회 5월 19일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라 -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
- 8회 6월 2일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라' 이슈페이퍼 발간에 부처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9회 6월 9일 코로나19와 중대재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 박다혜 변호사
- 10회 6월 13일 산업안전보건 체험교육, 변화가 필요하다 - 우종현 한국안전체험교육원장
- 11회 6월 23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12회 7월 25일 중소기업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요- 정상민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 회장
- 13회 8월 1일 안전한 일터, 노동자의 권리 주장이 만든다 - 김지훈 공인노무사
- 14회 8월 4일 타들어 가는 일터에 필요한 '법과 원칙' - 박다혜 변호사
- 15회 8월 22일 전문건설업 안전보건 발전방향 - 이상준 전문건설업 KOSAH협의회장
- 16회 9월 1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라는 방패막이 - 박다혜 변호사
- 17회 9월 8일 님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
- 18회 9월 19일 하루에 100명씩 산재 장애인이 발생한다 - 정혜선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19회 9월 26일 건설업 위험성 평가, 문서화에 그쳐선 안돼 - 권영길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20회 10월 6일 죽음의 외주화 넘어서 노조법 개정 -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
- 21회 10월 24일 사업주의 인식·태도 변화가 중대재해 막는다-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위원장
- 22회 10월 27일 중대재해 재판, 함께 돌아보기가 필요하다 - 박다혜 변호사

▷ 전문가 좌담회 : 1회

- 5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엇갈린 시선] “공포감 조성 안 돼” vs “처벌 강력, 기업엔 공포”

▷ 캠페인 슬로건 온·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 배너 게재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244일
- 오프라인 지면 광고 중대재해처벌법 13회

매일노동뉴스

발행: 2022. 11. 29 07:31 (월) | 목요일 | 기획연재 | ② 내내일

노동 정치·경제 사회 사람&문화 안전과 건강 기획연재 오피니언 노동사건

노동연면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위험에 남겨진 사람들 ②] 위험을 종장타는 삼아 일하는 플랫폼 이동노동자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의무 내행개진 플랫폼사 ...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에도 사각지대 광범위

제창남 기자 | 입력: 2022.08.04 07:30

댓글 0



▲ 서울강남구 오동구 가파르다 아파트 인근 벽돌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종장타는 삼아를 수확한다. <일가정 기자>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고, 50명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법률 공포 후 3년 후에나 시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뿐 아니다. 언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여전히 안전보건법령 태두리 바깥에 있는 노동자의 현장을 <매일노동뉴스>가 찾았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일환으로 공동기획했다. <편집자주>

매일노동뉴스

발행: 2022. 11. 29 07:31 (월) | 목요일 | 기획연재 | ③ 내내일

노동 정치·경제 사회 사람&문화 안전과 건강 기획연재 오피니언 노동사건

기획특집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위험에 남겨진 사람들 ③]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현장실생생

'사각' 발생→제도 개선→완화' 악순환 ... 산업안전보건법은 '구멍' 중대재해법에선 '해결'

여교은 기자 | 입력: 2022.09.20 0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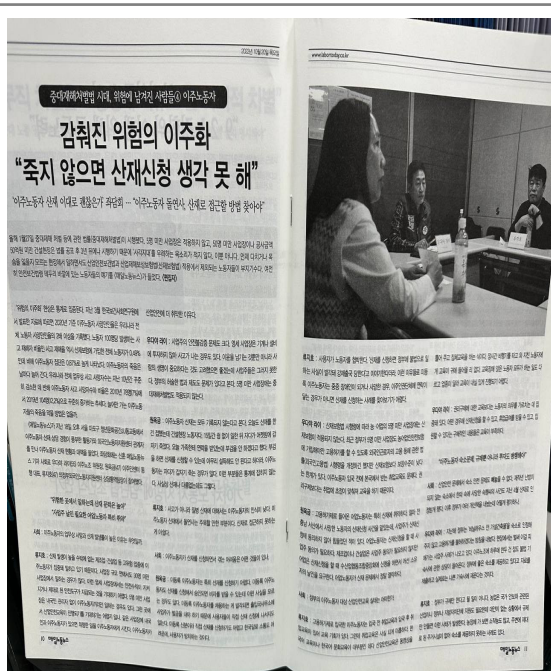
댓글 0



▲ 서울강남구 오동구 가파르다 아파트 인근 벽돌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종장타는 삼아를 수확한다. <일가정 기자>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고, 50명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법률 공포 후 3년 후에나 시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뿐 아니다. 언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여전히 안전보건법령 태두리 바깥에 있는 노동자의 현장을 <매일노동뉴스>가 찾았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일환으로 공동기획했다. <편집자주>

현장 취재 및 심층보도



현장 취재 및 심층보도 지면

노동 정치 · 경제 사회 사람&문화 안전과 건강 기획연재 오피니언

전문가 칼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라는 방패막이

박다혜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금속노조 법률팀)

박다혜 입력 2022.09.01 07:30

댓글 0

가 0

그동안 종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종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껴 왔다. 종대재해 예방의 권한과 책임을 조율시키는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도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불행히도 이 땅의 기업들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보다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취지의 권익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경영책임자의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현장 애로들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된 지 고작 몇 개월 채 되지 않은 때의 일이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현행 시행령의 한계를 지적하며 오히려 경영책임자의 종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선택적으로 귀를 닫았다.



▲ 박다혜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금속노조 법률팀)

종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정작 현재 이 법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법원의 판단에조차 존재하지 않는 법에 대해, 심지어 그 입법 취지는 여전히 굳건히 남아 있는 현실에서 법을 후회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다. 위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함 속에서,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았으니.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생동감에도 노동안전보건 소관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 정부조직법상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회계·회계·국고·정부회계·내국세·국제세·국세·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제투자·인간투자 및 국가재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비밀리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재계의 민관대로 종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제시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노동자의 삶과 죽음 국가발전의 연료로,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안전문화확산 칼럼 기고

노동 정치 · 경제 사회 사람&문화 안전과 건강 기획연재 오피니언

전문가 칼럼

중소규모 사업장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요

장성민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회 회장(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장성민 입력 2022.07.25 07:30

댓글 0

가 0

종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종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건설안전부문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업들은 전담 안전조직을 신설했고,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높여 가고 기업마다 안전인원을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 장성민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회 회장(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요즘 안전인력시장은 시냇물과 자락줄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 호황의 시기가 됐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건설안전전문은 안전실적은 투자 대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초 정부는 산업재해 사고를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 사고 20% 감축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현재까지 추세로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많은 투자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지난해 대비 10%가량 산재가 감소한 효과를 봤지만 막대한 비용투자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종대재해 발생률과 비율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중소기업로 사업장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으로 이 가운데 80.9%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종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0명(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중소기업로 사업장은 전혀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히려 20억~50억원 미만 중소기업장의 경우 종대재해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26.7%가량 증가했다.

정부나 지자체들은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50억원 미만 중소기업로의 현장을 집중관리하고 지혜를 쓸 방안을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노동 정치 · 경제 사회 사람&문화 안전과 건강 기획연재 오피니언

전문가 칼럼

다운폴 : 안전불감증의 발생기전

최진일 충남노동안전보건센터 대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진일 입력 2022.04.14 07:30

댓글 0

가 0

늦비가 흘날리는 4월이다. 늦비처럼 노동자들도 일터에서 멀어져 내리는 저질한 현실 속에서 한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은 영화로 여기다. 길거리에서 활개 치고 추장하는 일이 한탄할 여지가 있는 시대, 당분간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이들에게 똥가 나눌 거리가 있는 다큐멘터리로 <다운폴-더 보잉 케이스>를 소개한다.



▲ 최진일 충남노동안전보건센터 대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영화는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두 건의 보잉 737MAX 여객기의 추락사고를 다루고 있다. 2018년 10월29일 인도네시아 수카발라 히타 국제공항에서 737MAX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제작사 보잉은 조종사의 미숙함과 실수를 원인으로 내세우며 자사의 최신 기종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음을 주장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다. 보잉의 총력전으로 요약을 거둬 미연방항공국(FAA)은 737MAX의 운항을 재인하는 '이륙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5개월 후 에티오피아 볼레 국제공항에서 또 다른 737MAX가 마찬가지로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전 세계 항공사들과 FAA는 그제야 해당 기종의 이륙을 금지하고 기체의 결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

사고 원인은 737MAX에 새롭게 탑재된 MCAS라는 장치의 결함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잉사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직적으로 관련 정보를 철저히 숨기며 왔다는 점이다. 737MAX는 보잉에 에어버스사의 신상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 737 기종의 형상을 키워 급하게 시장에 출시한 기체였다. 보잉은 시장 장악을 위해 기존 737 기종을 조종하던 파일럿은 추가적인 교육 없이도 737MAX를 조종할 수 있다는 점을 판매전략으로 삼았다. 이는 파일럿의 추가 교육비용과 시간이 큰 부담이었던 항공사들에게 엄청난 메리트였다. MCAS는 비행기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장치로 파일럿들이 분명히 숙지해야 할 사항이었지만 보잉의 판매전략에 의해 이 장치는 비밀에 부쳐진 것이다. 결국 파일럿들은 MCAS의 존재조차 모른 채 조종석에 앉았고 이 장치의 오작동을 일으켜 비행기가 스스로 땅으로 내리쫓히는 동안 원인을 파악할 수도, 적절한 대응을 할

노동 정치 · 경제 사회 사람&문화 안전과 건강 기획연재 오피니언

전문가 칼럼

'종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라' 이슈페이퍼 발간에 부처

류한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류한철 입력 2022.06.02 07:30

댓글 0

가 0

지난달 31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종대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종대재해는 그 이전에 관련한 수많은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지속적으로 무시된 결과로 발생한다. 상당수 종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의 미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발성 재해다. 그러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의 미비를 단순한 인적 오류나 현장 감독자의 안전불감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선입적 판단을 내리서는 안 된다. 총중적인 고용 계약과 관행 속에서 안전보건 사실과 장비에 투자해야 할 비용이 누수되고, 적정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용되고 공기 등에 쏘여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점검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대부분의 종대재해에 이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애초 종대재해기법법 제정운동의 배경에는 산업 재해를 불러오는 구조로서 '원인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 류한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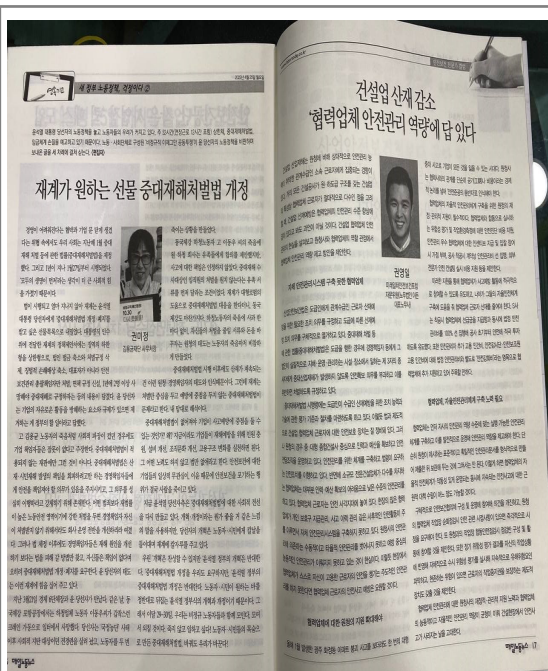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에 안전보건공단과 근로감독관에 의해 작성된 종대재해조사서의 견해를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서 여법사리 입수해 검토한 결과를 이슈페이퍼로 묶어 낸 것이다. 종대재해처벌법 기본 취지를 살려 정책을 포함해 기업경영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에 분담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구조적인 부분까지 파헤쳐 줄는 심층적인 재해원인 조사가 그 출발이다. 종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재해가 발생했다면 언론의 관심이 모아져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재판을 영향 미친다는 이유로, 혹은 기업의 정 보를 담고 있어서 등 여러 이유로 재해를 조사한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슈페이퍼는 비공개된 전체로 작성되는 기존 재해조사에 기초한 행정 및 사업 관행으로는 종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끌어 낸 사회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며 산업재해에도 기여하기 어려울 것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또한 이슈페이퍼에서는 종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는 재해조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재해자 신분, 임무의 내용, 재해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최대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밝혀야 하며 그를 현장측은 방지 조치를 명확히 시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② 직접 원인, 기술적 요인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간접요인이나 구조적 요인과의 연계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③ 원인의 원인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주체를 들어내야 한다.

안전문화확산 칼럼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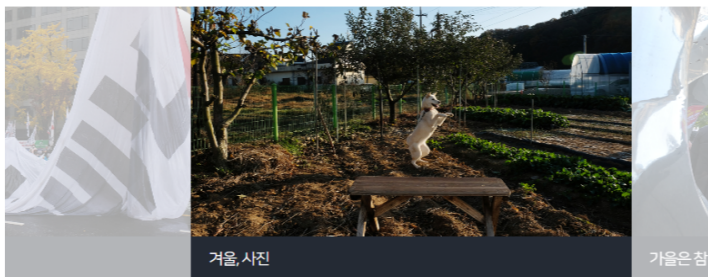


안전문화확산 칼럼 기고 지면



안전문화확산 칼럼 기고 지면

사진이야기

국민의 마음을 **안다**, 국민을 따뜻하게 **안다**

정부 “화물연대 파업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재난”

정부가 공공연수소도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코로나19 사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종량제재난대책본부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노사관' 개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노조교섭 예고된 결렬

야당·노동계 “위기의 자금시장, 고용안정 대책 필요”

자금시장 경색 지속에 대비해 금융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김영진 의원, 사무금융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칼럼

노노모의 노동에세이
치열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

김승호의 노동세상
김종수 열사를 추모하며

조건준의 **아무나** 유니온
우리는 양파가 아니다

인재갈림 선택



온라인 배너 광고



지면 광고

06 머니투데이

사업명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취약계층 근로자 산업재해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적

기획기사, 전문가칼럼, 좌담회, 온오프라인 광고

내용

- ▷ '안전수칙 준수해 산업재해 예방하자' 취재기획 : 2회
 - 1회 7월 21일 안전보건공단 '중대법 안착' 총력전
 - 2회 11월 7일 공장사고 줄이려면... "쉴부서 직원이 위험성평가 참여해야"
- ▷ 안전문화확산 전문가 칼럼 기고 : 3회
 - 1회 6월 2일 [기고]산업안전도 '월드클래스' 국가로 - 김기선 충남대 교수
 - 2회 6월 30일 [기고]경영책임자 중심 '안전문화' 정착을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 3회 10월 4일 [기고]산재사망사고, 왜 안줄어드나? - 강성규 가천대 교수
- ▷ 머니투데이 지면 캠페인 : 1회
 - 오프라인 지면 캠페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모두의 노력' 1회
- ▷ 안전보건 온라인 홍보기사 : 35회
 -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올해 총 3563억원 / 도·소매업 사망 사고 절반 이상이 떨어짐·부딪힘...고용부, 관리 강화
 - "더 이상 사망사고 안돼"...중견·중소 건설업체 산재 예방 컨설팅 시행 / 안중주 신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현장 발로 뛰며 소통할 것"

내 용

- 화재·폭발 위험 화학업체, 사고 예방 위해 이것부터 점검하세요 /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 붕괴로 HDC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소
- 안전수칙만 준수했어도...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자 172명 / 안전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광주 붕괴사고 철저히 조사하라"
- 임업 사고사망 10명 중 8명 고령자...50대 이상 86%, '안전 급선무' / 고용부,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 투자 비용 50% 지원...업체당 최대 1억원
-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현장 갈탄으로 질식사...열풍기 사용 지침 / 안전보건공단, 안전한 보호구 착용으로 사고 예방하세요
- "혹시 60대 남자세요? 일하실 때 특히 조심하세요" / 중대법 시행 이후 안전수칙만 지켰어도...법 적용 업체서 40명 사망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화재·폭발 위험성 높아져" / 5년간 폭염으로 156명 재해...현장 그늘막 등 100억 규모 지원
- 50인 미만 업체, 사고 위험 개선하면 비용 최대 70% 지원 / "산재 줄이려면..." 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
- 중대산업사고 그만!...충청권 기업 임원들 사고 예방 위해 모였다 / "태풍 와요, 운전 자제하세요"...배달하기 전에 날씨 알려준다
- 안전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데이터가 힘이다" / 공공발주 공사 사망자 절반 줄었는데, 민간은 24% 감소에 그쳐
- "삼성물산·남동발전 참 잘했어요"...산업안전 우수사례 선정 / 안전계획서도 냈는데 7월까지 건설현장 사고사망 총 46명
- "2년 후엔 소기업도 중대재해법 적용"...맞춤형 가이드북 나왔다 / 고용부, 추석 앞두고 택배 등 350여개 물류업체 불시점검
- "중대재해법 헛갈리시나요? 이제 사례집 찾아보세요" / 울산 산업단지 '공정안전 리더회의' 개최... "화학사고 예방 총력"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위한 '중대재해 예방서' 나왔다 / "제2 SPC사태 막아라"...정부, 전국 1000개 식품회사 집중점검
- 50인 미만 업체 사망사고 5년간 767명..."원인 1위 지게차" / "단풍 좋네" 풀밭 앉아 쉬었다가...3주 뒤 나타난 '이 증상' 조심하세요
- 최근5년 승강기 공사중 38명 사망...'안전 작업대' 국내 첫 설치 / 대전 아울렛 참사에도...복합쇼핑몰 10곳 중 4곳이 안전 '불량'
- 안전보건공단, 추락예방 신기술 무상이전..."산업현장 상용화"

[기고]"산업안전이 '월드클래스'인 대한민국 보고싶다"

마너투데이 | 김기진 출판기획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판 기획과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종 아들과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함께 시청하는 것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 선수 같기를 보고 싶단다 그러하다 유쾌하게는 아니지만, 서툰말로 '복록이' 자로써서는 말이다. 글이 출반된 순간까 아니라도 무척아직 근심할만 이유가 충분하니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소나 말이다.

6.25와 미국작 전쟁이 남긴 상처 위에서 정부 부도와 경제개혁 노동자의 투쟁을 기억하며 독재 폭력 라틴 강의 기록에 필적한 반공의 기록이다 별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 됐고, 지금은 G20(주요 20개국) 회국 중 하나이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최선진국 그룹이라 할 수 있는 G7 국가들에도 맞춰 경제 규모를 가진 경제강국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기고]산재사망사고 왜 안줄어드나?

마너투데이 | 강규구 가천대 일반행정학과법학과 교수(강남대학교 교수) 산업안전보건학회 회장)



충격! 재해 발생 관련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었다. 경찰·검찰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률을 시행함에도 사망사고는 기대만큼 줄지 않는다. 사망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발생한다. 사고가 나면 근로감독관들은 압수수색을 하고 질 높은 서류를 발탁짓게 검토하는데 죽을 때가 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 직원은 사고조사에 대응하러도 분업을 제치고 대란업무가 정신이 없다. 그래도 제대로 처벌받은 경영책임자는 없고, 사망사고도 줄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산재예방 분야에 지난 20년간 한국의 사회경제지표처럼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산재보험 제도까지 완성된 2000년대 초반 말 당시 사망률은 15.6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4.6명이었다. 20년간 70%가 감소했다. 다자간포화 학내 위험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됐다 하더라도 아직 EU 15개국의 평균 내 사고사망률에 비해 세 배 높다.

그렇다면 왜 산재사망사고는 다른 사회경제지표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법 제도와 행정집행의 부족도 때문은 있지만 제도는 크게 영미법계, 대륙법계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간헐히 정확하면 영미법은 고정적인 자원을 갖고 급기에 책임을 진다. 대륙법은 장소에 지체가 될 경우 군수를 책임자를 강조한다. 한국의 법 제도는 대륙법 체계인 일본법을 참고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집행, 즉 감독의 방향은 명확하겠. 정확한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우리 법체계로는 영미 국가처럼 일정에 책임을 물을 방식을 취할 수 없다. 아무리 큰 사고를 벌어도 결국적으로는 규정 하나를 위반한 것이므로 법을 엄하게 물 수 없다. 그렇다고 국민의 감시제도를 처벌하는 것은 의무감으로라도 찾아다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소한 함정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함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정제를 준수하지 주조로 위반하면 피라는 것이다. 그러나 처벌이 불가능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모여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안전을 위한 [관심]
우리를 We한 [참여]!

안전을 위한 [투자]
우리를 We한 [협력]!

안전을 위한 [식각]!
우리를 We한 [생각]!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카드뉴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화재·폭발 위험성 높아져"

머니투데이 | 서울=오세종 기자

2022.04.10 12: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산업현장의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이어 따른 화재·폭발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10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 위험성평가 보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분쇄·조각(금기 중 부유 및 비파괴) 및 비 표면 용의 화학적 위험성 평가, 적대공정 취급 분말 플라스틱 용성인 등 분진의 종류에 따른 화학물질의 특성상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관련기사 제2의 '보스직장' 골판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배출 기업 코스타도 진출



N 내이버 메인에서 마니투데이 구독
카카오북에서 마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금상송
"손흥민, 변두 손 부리치고 화물야"...경기 후 장면 논란
김구라 27억에 싼 천 원원 만, 15년 만에 시세 떨어보니
"76세" 농돌이 아예 김용진 "난 지금도 여 자들이랑 놀아"
이강인, 마지막 이 땅을 누르려 나왔다
"포기 안해 갑출전들"
김현중 "주말 전 태어난 주, 조금 앓고 걸 순자 흔들라"...후손 닐?
오승근의 '포도' 구대할 때 '3개'만 지켜라.
죽은 김보성! 레이저 대신 '이것' 발라봐
TV출연 주시진에 실재 주인공 근황 알아보니...

"삼성물산·남동발전 참 잘했어요"...산업안전 우수사례 선정

머니투데이 | 서울=오세종 기자

2022.07.06 16:02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사례로 김철보에서 **삼보물산** (121,000명) ▲1,500 +1.26%, 기타분야에서 한국삼보물산을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6월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관' 및 야 행사가 열리고 있는 일산 컨벤스 제2전시관에서 기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형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N 내이버 메인에서 마니투데이 구독
카카오북에서 마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금상송
"손흥민, 변두 손 부리치고 화물야"...경기 후 장면 논란
김구라 27억에 싼 천 원원 만, 15년 만에 시세 떨어보니
"76세" 농돌이 아예 김용진 "난 지금도 여 자들이랑 놀아"
이강인, 마지막 이 땅을 누르려 나왔다
"포기 안해 갑출전들"
김현중 "주말 전 태어난 주, 조금 앓고 걸 순자 흔들라"...후손 닐?
오승근의 '포도' 구대할 때 '3개'만 지켜라.
죽은 김보성! 레이저 대신 '이것' 발라봐
TV출연 주시진에 실재 주인공 근황 알아보니...

안전보건 온라인 홍보기사

50인미만 업체 사망사고 5년간 767명..."원인 1위 지게차"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2022.10.26 09:47



(왼쪽=뉴스1) 정진우 기자 / 오른쪽=한국노동연구원 제공. 이화재단 8월 30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한 세미나 모습. 사진은 2022.10.26. 뉴스1

최근 5년간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33%는 지게차 등 위험 기계·구동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업 사망사고 노동자는 총 1017명으로, 이 중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제조업이 767명이었다.

어린이 사망하게 된 기원(원인이 된 기계)을 보면 33.4%(256명)가 지게차 등 위험 기계·구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이 위험한 기계나 구조로 작업했다. 순위는 이었다.

기계·구동에 의한 사망사고는 지게차(81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크레인(37명), 컨베이어(27명), 지붕(22명), 사다리(19명), 화물운반차(18명), 배합 혼합기(17명), 굴삭기(12명), 트랙터(12명), 산업용 로봇(11명), 분쇄파쇄기(10명), 사출기(10명) 순이었다.

고용부는 관계자는 "끼임 사망사고는 주로 크레인, 컨베이어, 배합 혼합기, 산업용 로봇, 사출기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거나 부딪히는 사망사고는 지붕, 사다리, 지게차, 굴삭기 등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11.3% - 12.5%
한샘을 최저가 리빙용품



N 내이비 매장에서 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에서 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1. "손흥민, 반투 손 부리치고 화물차"...경기 177 후 장전 논란

2. 김구라 2.7억에 샀던 철원 망, 15년 만에 3.2배 팔려보니

3. 76세 농동이 아파 입원한 '난 지금도 여 21 자들이랑 놀아'

4. 이강민, 마지막 이 땅들에 누르곤 울었다

5. 김형준 '두달 전 태어난 쿠, 초점 잃고 걸 18 온자 졸음러'...무슨 일?

6. 김형준 '두달 전 태어난 쿠, 초점 잃고 걸 18 온자 졸음러'...무슨 일?

대전 아울렛 참사에도...복합쇼핑몰 10곳 중 4곳이 안전 '불량'

머니투데이 | 김주환 기자

2022.11.14 14:18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로 125-1에 위치한 대전 아울렛. 사진은 2022.11.14. 뉴스1

장부가 지난 9월 사망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리크 아울렛(아운렛)' 화재의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87개 쇼핑몰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복합쇼핑몰 중 대형 유통업체 207개소(가점)에 대한 안전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개선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점검에 앞서 고용부는 복합쇼핑몰 450여개소를 확정하고 이 중 콘크리트 수와 이용객 수, 산업기재의 위험도를 고려해 207개 지점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명이 참여했다. 하역장과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11.3% - 12.5%
한샘을 최저가 리빙용품



N 내이비 매장에서 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에서 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1. "손흥민, 반투 손 부리치고 화물차"...경기 177 후 장전 논란

2. 김구라 2.7억에 샀던 철원 망, 15년 만에 3.2배 팔려보니

3. 76세 농동이 아파 입원한 '난 지금도 여 21 자들이랑 놀아'

4. 이강민, 마지막 이 땅들에 누르곤 울었다

5. 김형준 '두달 전 태어난 쿠, 초점 잃고 걸 18 온자 졸음러'...무슨 일?

6. 김형준 '두달 전 태어난 쿠, 초점 잃고 걸 18 온자 졸음러'...무슨 일?

안전보건 온라인 홍보기사

"2년 후엔 소기업도 중대재해법 적용"...맞춤형 가이드북 나왔다

머니투데이 | 김주환 기자

2022.08.11 12:00



중소기업 다자간기업(사)은-중소기업 다자간기업

2024년부터 50인 미만 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급속조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제작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그동안 제작한 자율점검표와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기업과 규모 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이드북은 급속조업업을 시작으로 △육속화물화물업 △영역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업종을 중심으로 총 20여종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

11.3% - 12.5%
한샘을 최저가 리빙용품



N 내이비 매장에서 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에서 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1. "손흥민, 반투 손 부리치고 화물차"...경기 177 후 장전 논란

2. 김구라 2.7억에 샀던 철원 망, 15년 만에 3.2배 팔려보니

3. 76세 농동이 아파 입원한 '난 지금도 여 21 자들이랑 놀아'

4. 이강민, 마지막 이 땅들에 누르곤 울었다

5. 김형준 '두달 전 태어난 쿠, 초점 잃고 걸 18 온자 졸음러'...무슨 일?

6. 김형준 '두달 전 태어난 쿠, 초점 잃고 걸 18 온자 졸음러'...무슨 일?

임업 사고사망 10명 중 8명 고령자...50대 이상 86%, '안전 급선무'

머니투데이 | 서울=오세훈 기자

2022.01.18 1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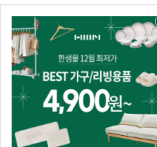
임업(사)은-미니투데이 구독

최근 5년간 임업의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사망 10명 중 8명(80%)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40%(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70대 재채자도 3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임업에서 활동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업 작업은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는 특성으로, 산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며, 작업자의 기능과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업 작업의 재해는 대부분 목재와 기계 등을 통해 발생하며, 발생형태로는 불특정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려서 뒤집히면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11.3% - 12.5%
한샘을 최저가 리빙용품



N 내이비 매장에서 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에서 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1. "손흥민, 반투 손 부리치고 화물차"...경기 177 후 장전 논란

2. 김구라 2.7억에 샀던 철원 망, 15년 만에 3.2배 팔려보니

3. 76세 농동이 아파 입원한 '난 지금도 여 21 자들이랑 놀아'

4. 이강민, 마지막 이 땅들에 누르곤 울었다

5. 김형준 '두달 전 태어난 쿠, 초점 잃고 걸 18 온자 졸음러'...무슨 일?

6. 김형준 '두달 전 태어난 쿠, 초점 잃고 걸 18 온자 졸음러'...무슨 일?

안전보건 온라인 홍보기사

07 부산일보(주)

사업명

안전한 일터 우리가 만듭니다

실적

기획기사, 전문가 기고문, 지면 캠페인

내용

- ▷ 산업안전 기획시리즈(기획보도) : 3회
 - 1회 7월 1일 흔들리는 '중대재해처벌법'
 - 2회 7월 29일 심각한 부산항 항만사고
 - 3회 8월 30일 산재, 가족에겐 사회적 재난
- ▷ 전문가 기고문 : 2회
 - 1회 5월 27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 2회 10월 20일 안전은 경영의 변수가 아닌 상수
- ▷ 부산일보 지면 캠페인 : 2회
 - 안전한 일터 우리가 만듭니다 지면 광고 2회



안전한 일터 우리가 만듭니다

"부산일보"는 안전·건강·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일터·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 사고와 위험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본 지가 지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부산일보가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01 실각한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에 과도한 처벌" ...
시행 반년도 안돼 '법 개정' 시도

2022년 07월 01일 금요일 #11면 기획보도

02 실각한 부산항 항만 사고



전국 4대 항만 중 '사망자 1위' ...
부산항, 불명예 벗을 때

2022년 07월 29일 금요일 #8면 기획보도

03 신재 가족해전 사망자 제보



낙인·상실감·생활고 ...
남은 가족도 보듬어야

2022년 08월 30일 화요일 #10면 기획보도





지면 캠페인

8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제 2376호

기획

부산일보

전국 4대 항만 중 '사망자 1위' ... 부산항, 불명예 벗을 때

■ 안전 일터 우리가 만듭니다

● 심각한 부산항 항만사고

최근 5년 사망 19명 중 12명 발생
작년 5월에도 지체 없이 1명 숨겨
무리한 작업 강행 등 원인 골짜
장비 노후화도 사고 위험 부추겨
노후, 안전사고 예방 교육장 준비

부산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 항만 작업은 선박 입·출항, 물품 하역 등 다양한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에서는 노동자들이 중대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사망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산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19건으로, 이는 전국 항만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특히 작년 5월에도 지체 없이 1명 숨겨 무리한 작업 강행 등 원인 골짜 장비 노후화도 사고 위험 부추겨 노후, 안전사고 예방 교육장 준비

■ 항만 사망사고 3년 후 2건에 부산항
지난해 12월 29일 부산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3년 만에 2건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항만 중 가장 적은 수치이다. 그러나 항만 작업은 여전히 위험한 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에서 전라남도를 관여하던 2021년 12월 29일 부산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3년 만에 2건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항만 중 가장 적은 수치이다. 그러나 항만 작업은 여전히 위험한 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도	사망	부상	합계
2017년	6명	47명	53명
2018년	8명	58명	66명
2019년	9명	31명	40명
2020년	11명	29명	40명
2021년	12명	25명	37명
합계	46명	190명	236명

연도	사망	부상	합계
2017년	24명	216명	240명
2018년	37명	217명	254명
2019년	26명	218명	244명
2020년	26명	219명	245명
2021년	27명	220명	247명
합계	140명	1090명	1230명

전 산업 부문 사망인원(10.4%)에 비해 가장 높았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 사망 인원은 1.25배, 전 산업 사망인원(10.5%)의 1.5배에 달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낙상'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했다. 이어 '물 들어' (18.9%), '기계·장치' (13.2%), '교통' (11.3%) 순이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교육과 노후 장비 교체 등이 필요하다.

■ 반박되는 사고 이유와 대책
전문가들은 항만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를 선박 입·출항, 물품 하역 등 작업 중 발생하는 낙상과 노후 장비, 불안전한 작업 등 여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노후 장비와 불안전한 작업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항만 작업은 선박 등 출항 일정에 따라 단시간에 고강도로 이뤄지는데 노동자의 안전은 우선순위에 걸리지 않는다. 부산항 측은 타항에서 부산항으로 작업자를 파견하는 모습.

도 한발짝도. 부산항은 국내에서 물량상 이 가장 많지만,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실제로 전국 4대 항만 중에서는 부산항이 가장 많은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5월에도 지체 없이 1명 숨겨 무리한 작업 강행 등 원인 골짜 장비 노후화도 사고 위험 부추겨 노후, 안전사고 예방 교육장 준비

제로, 선박 교체까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항만 작업은 선박 등 출항 일정에 따라 단시간에 고강도로 이뤄지는데 노동자의 안전은 우선순위에 걸리지 않는다. 부산항 측은 타항에서 부산항으로 작업자를 파견하는 모습.

도 있었다. 부산항은 노후 장비 교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실제로 전국 4대 항만 중에서는 부산항이 가장 많은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5월에도 지체 없이 1명 숨겨 무리한 작업 강행 등 원인 골짜 장비 노후화도 사고 위험 부추겨 노후, 안전사고 예방 교육장 준비

다음 달 시행 항만안전특별법, 지자체 역할 구체 명시 안 돼 실효성 의문

항만 총괄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안전법률 체계 구성에 지자체 역할
지역·특수성 반영 뒷받침 필요

항만 안전 관리를 위해 도입된 항만안전특별법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 안전 관리를 위해 도입된 항만안전특별법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 안전 관리를 위해 도입된 항만안전특별법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 안전 관리를 위해 도입된 항만안전특별법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 안전 관리를 위해 도입된 항만안전특별법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 안전 관리를 위해 도입된 항만안전특별법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강경향문 + 법화경향좌

부산

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30분 ~ 4시30분
장소: 부산역 앞 광창호텔 뒤편 5층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200-13)

대구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0분 ~ 4시30분
장소: 이시아 폴리스 테일아너스타워 상가1층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41)

- 동행자격: 불경공부를 바르게 하려는 분
- 수강회비: 무료(단, 교재비 3만원 자부담)
- 교육기간: 20주 (수시모집)
- 문의전화: 010-4501-8711

키스대학교 前 명예총장
최 광 영 연구실

부산일보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하고 구독료 할인받으세요!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월 구독료를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 자동이체(계좌·카드이체) 신청방법 ●

전화신청

1544-7044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따라 주신, 성명,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카드번호),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직접신청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창구직원을 통해 '부산일보 구독료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 우체국직통 창구서 지참)

www.busan.com

08 (주)안전신문사

사업명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우수사업장 영상 제작 및 홍보 사업

실적

전문가칼럼, 온라인콘텐츠 홍보, 오프라인 광고

내용

- ▷ 안전문화확산 전문가 칼럼 기고 : 10회
 - 1회 6월16일 중대재해처벌법 왜 효과가 없나
 - 2회 6월23일 노동자 참여·위험작업 중지권 실질적 대책 필요
 - 3회 7월 4일 중대재해 예방 요체는 '위험요인 발굴·개선'이다
 - 4회 7월21일 중대법은 새로운 모티브로 해답 찾아야 한다
 - 5회 7월28일 안전은 참여자 모두의 권한·책임에서 시작된다
 - 6회 8월11일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에 부친다
 - 7회 8월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 및 쟁점
 - 8회 8월25일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 9회 9월 1일 '중소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로부터...
 - 10회 9월 8일 "설마" 대신 "만에 하나"로 안전의식 전환해야
- ▷ 온라인 콘텐츠 <우리들의 안전을 소개합니다> 제작 홍보 : 17편
 - 1편 9월27일 인천국제공항
 - 2편 10월14일 한국도로공사
 - 3편 10월19일 수산인더스트리
 - 4편 10월20일 대보정보통신
 - 5편 10월21일 영창케미칼

내 용

- 6편 10월25일 CJ제일제당
- 7편 10월25일 쌍용건설
- 8편 10월26일 GS건설
- 9편 10월28일 한국수자원공사
- 10편 10월28일 롯데건설
- 11편 11월1일 한국플랜트서비스
- 12편 11월2일 CJ ENM
- 13편 11월3일 한국남동발전
- 14편 11월3일 삼성물산 화성HPC센터
- 15편 11월9일 매일유업
- 16편 11월10일 디오텍코리아
- 17편 11월10일 롯데마트
- 온라인 게시 17회

▷ 안전신문사 지면 캠페인 : 10회

- '중대재해처벌법' 일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지면 광고 10회

안전은
권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일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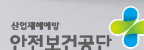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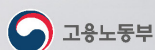
● 기업·기관·단체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 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 ② 종사자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 ③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인력·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또한 재해가 발생하면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www.koshasafety.co.kr)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령·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업종별 자율점검표·강의동영상
- 재정지원·컨설팅 사업 안내



안전신문사 지면 캠페인



온라인 콘텐츠 <우리들의 안전을 소개합니다> 제작 홍보



온라인 콘텐츠 <우리들의 안전을 소개합니다> 제작 홍보

09 (주)조선일보사

사업명

조선일보 산업안전 캠페인 <만화로 그리는 안전한 대한민국>

실적

만화 지면 캠페인

내용

- ▷ 만화로 그리는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 : 4회
- 1회 7월 5일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 2회 7월 6일 질식편 - 맨홀질식
 - 3회 7월 7일 질식편 - 양돈농장질식
 - 4회 7월 8일 추락편 - 아파트 달비계
 - 5회 7월 9일 추락편 - 건설현장 개구부
 - 6회 7월 11일 추락편 - 태양광 설치
 - 7회 7월 12일 끼임편 - 컨베이어 벨트끼임
 - 8회 7월 13일 끼임편 - 고소작업대
 - 9회 7월 14일 끼임편 - 자동송급장치
 - 10회 7월 15일 충돌편 - 오토바이



